

공정사회·지역배려 후보 누구 호남민심 결집 영향력 키워야

긴급진단
빨라진 대선시계

⑥ 호남주도 정권 창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민심은 '호남 주도 정권 창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 주자들이 내걸었던 '호남 주도 정권창출론'에 높은 호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떠한 흐름을 형성할 것인지 주목된다. 호남 민심의 향배는 야권 잠룡들의 대선행 티켓을 결정하는 등 대선 구도에 있어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의 조기 대선 구도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을 담보할 구체적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장, 호남 출신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고 정동영, 박우선 의원 등이 대선 도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지율 측면 등을 고려하면 대선 판을 흔들 수 있

천정배·정동영 등 출마 고심

유력 주자 없어... '연대' 주목

통합 리더십에 표심 쏠릴 듯

을 정도의 파괴력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호남이 주축 세력인 국민의당도 현재로서는 자체 동력으로 정권 창출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정'이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 방법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발판으로 타 정당과의 연합 정부 수립에 나서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직전 민주당이나 제3지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친박(친 박근혜)과 친문(친 문재인) 세력 등을 제외하고 중도·민생을 기치로 내건 '반 패권주의 연대' 구성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박기문-안철수-손학규 등이 제3지대에 모여 중도 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국민 경선을 치른다면 대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호남 민심의 향배다. 전반적인 호남 민심은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에 동의하면서도 '공정사회'로 집약되는 시대 정신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와 예산, 정책 분야 등에서 호남이 소외받지 않는 구체적 공약, 시스템 구축과 함께 영남 측이 중심인 '권력, 자본, 기회의 독점 구도'와 사회 전반의 기득권 구도를 깰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같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결집을 통한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호남 민심이 갈라지면 그만큼 호남 민심이 요구하고, 주도하는 정권 창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민심의 흐름과 관련, 특정 세력이나 후보 선택에 나서기 보다는 일단 정국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 대선 구도가 구체화 되면 호남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첫 눈, 어지러운 세상 하얗게 씻어라 하루 종일 눈이 내린 15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를 찾은 시민들이 귀가를 서두르고 있다. 광주지방법기상청은 16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폭로... “현직 부총리급 정윤희에 수억 뇌물” 주장도

박근혜정부에서 대법원장을 비롯, 사법부 간부에 대한 감사와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희씨가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지난 2014년 '정윤희 문건'을 보도할

당시 사장을 지낸 조 전 사장은 이날 “보도되지 않았던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다고 들었는데, 한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 알려달라”는 새누리당 이해훈 의원의 질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낚날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공자 사적사용 이라든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

건이 보도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정윤희 문건’에 정씨의 수억 뇌물수수 의혹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당시에 저는 ‘정윤희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것을 하나만 가져오라고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직접 봤다. 다른 문건은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루 공무원이 장관급이나”고 묻자 “제가 알고는 부총리급의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금리 인상 악재 한국경제 초비상

연준 0.25%p 올려...가계부채·수출 등 악영향 우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가 1년 만에 오른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10면>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 포인트 떨어지고 나서 6개월째 동결됐다. 한은이 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급증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한 신중한 행보로 풀이된다.

연준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0.50%~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금리를 3차례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 인

상으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적어지면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졌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짐으로써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직후 신용공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내 경제로 눈을 돌리면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8조 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매년 1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멈추지 않은 상황

서 기준금리를 더 내리기 쉽지 않다. 반대로 국내 경기 부진을 생각하면 한은이 선택해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힘들다.

내수, 수출의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한 데다 정국 혼란이 겹쳐 올해 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대에 머물 공산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크다. 한은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연남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전남 내년 예산 확정

광주시의회(의장 이은방)는 15일 제 25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을 하고 45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정례회에서는 광주시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중 18억원을 감액한 4조398억원을,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29억원을 증액한 1조7962억원을 의결했다. 또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87개 기관 및 부서 단위를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14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시 4조398억·시교육청 1조7962억

전남도 6조3735억·도교육청 3조3496억

575건(시정처리 328건·제안사항 247건)을 지적, 시정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기간 중 조례안 44건, 동의안 5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5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전남도의회(의장 임명규)도 지난

14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 6조3735억원, 전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3조3496억원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폐회식을 하고 4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배려교통문화 작은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걸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안하기

운전할 때는
'정지선'
지키기

주정차할 때는
'정해진 곳'
에서 하기

불법주정차 신고 APP
안드로이드 | 아이폰

광주광역시 GWANGJU CITY